

삼척화전 지역업체 참여 반신반의

〈火電〉

【삼척】포스파워의 화력발전소 건설공사가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삼척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사 참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의 대형 건설공사에 따른 특수를 기대하는 반면 지역업체의 참여 방법 및 규모 등을 놓고 몇 해 전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뒤섞여 기대 반, 걱정 반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포스파워 삼척화력, 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사계

앞서 국책사업 호지부지 전례... 시가 적극 나서야 지적
획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인 포스파워는 최근 삼척시 전문건설협회 측에 관내 업체들의 면허상황 및 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명원을 의뢰, 화력발전소 건설공사에 지역업체를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지역업체들은 종합발전단지와 LNG기지 건설 당시 삼척시가 TF까지 가동하면서 국책사업에 지역업체를 참

여시키겠다고 애를 썼지만, 공사 특수성이나 발주 규정 등으로 인해 제대로 성사하지 못했던 전력을 들어 결국 호지부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형 국책사업으로 벌써부터 건설현장 구인난에 따른 용역 인건비가 오르고, 하루 55만원씩 하던 중장비 임대료가 60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급공사에 의존해 오던 지역 소규모 업체들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업체 관계자들은 "과거 국책사업 전력을 볼 때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해 이윤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안 됐고 더욱이 인건비와 중장비 임대료 등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오히려 어려움에 직면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척시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지역업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민진기자 hmj@**

도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 5조5000억

올림픽 후 남북관계 교류 집중

강원도가 2019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5조 5000억원으로 설정, 평창동계올림픽 후 남북관계 개선 교류 및 신(新)강원 전략 사업에 집중한다.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올해 국비확보액(5조 3025억원)보다 약 2000억원 상향한 것이다. 내년도 국비확보 중점 추진분야는 평창 올림픽 후 남북관계 개선 전망에 따른 남북교류사업과 신강원(신관광·신농업·신산업·신산림)전략이다.

또 올림픽 후 경기장 등 유·무형 유산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산업을 비롯해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관련 사업 △ 광

역교통망 확충 및 항만개발·수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 산림경영 및 산업관광 등 녹색경제 일자리 사업 △ 농림축산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6차 산업화 사업 등이다.

도는 23일 '2019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도는 오는 2022년까지 '채무제로화' 추진에 나선다. 도의 2017년도 실질채무는 3672억원으로 집계됐다.

김민재도 기획조정실장 "공공부문 투자 축소가 지역경제 침체 등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안전분야 등에 대한 재정투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건설 안전관리 책임 '시공사→발주자'로 중심이동

당정, 産災 감소대책 논의... 공사 단계별 책임 의무화 신설 추진

건설현장 안전관리 의무가 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대폭 넘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에서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기로 하고 건설기획·설계 등 공사단계별로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이는 건설산업의 최상위 결정자인 발주자의 관심 없이는 건설재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지난 2014년 486명에서 지난 2016년 554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발주단계부터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재해 예방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발주자의 단계별 책임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의무사항을 규정할 방침이다.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계획과 설계, 시공단계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책무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발주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공공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국무조정실에서 통합적인 점검체계를 갖추기로 했다"면서 "당은 필요한 입법과제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계획단계부터 공사중 위험예방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뉴스포커스

당정,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대폭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사단계별로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사항이 신설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서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은 시공사에게 집중돼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 산업재해가 좀처럼 감소하지 않는 등 시공사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당정은 산안법 개정을 통해 발주자에게 계획과 설계, 시공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책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발주자가 계획단계에서 공사 중 위험예방을 위해 충분한 공사기간과 자원

실제 댄 계획단계 정보 제공하고 관련 내용 실제 반영됐는지 확인 시공단계선 시공사 작업계획 관리 이행여부 등 확인하는 방안이 유력 안전관리자 선임현장 확대도 검토

배분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설계단계에서는 발주자가 계획단계의 정보를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실제 설계도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공단계에서는 시공자가 설계에 반영한 위험요소별 대책을 반영해 작업계획을 작성하도록 관리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정은 이런 내용 등이 반영된 발주자안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협의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출처: 연합뉴스)

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 발주 기관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 원청 사업자의 역할 확대를 위해 안전관리 책임 임장소 확대와 고유해 위험 작업 도급 금지, 원·하청 재해를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착공 전부터 시공,

공사단계 전반에 걸쳐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선임현장(현행 120억원 이상 규모 공사) 확대 등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이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안전 중시 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